

독일통일 20주년에 비춰본 한반도통일의 과제와 전망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독일통일 20주년에 즈음하여 한반도의 현 상황에서 남북통일에 대해 주변 4국이 미칠 수 있는 사실상(*de facto*)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서독의 통합정책과 통일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심층적인 연구의 대상이다.

한반도 통일의 궁극적인 동력은 북한주민들에 의해 뽑어져 나와야 한다.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린 동독주민처럼. 우리가 아무리 북한과의 통일을 염원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주민이 여기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무력적 수단을 배제하는 한 한반도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현 단계 대북정책, 궁극적으로 통일정책의 초점은 남북한 상생공영에 동의하는 북한주민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남북 간 상생공영의 과정에서 통일이 현실화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우리와, 우리 체제와 함께 하려는 북한주민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목 차

1. 서독의 통합정책 / 통일정책과 시사점
 - 가. 콘라드 아데나워
 - 나. 빌리 브란트
 - 다. 헬무트 콜
 - 라. 평가
 - 마. 우리의 통합정책 / 통일정책
 - 바. 주변국과의 통합과 남북통합
 - 사. 통합정책, 통일정책, 선진민주사회
2. 상생·공영과 녹색성장: 통합정책 / 통일정책
 - 가. 인간과 자연의 통합: 녹색성장
 - 나. 남북환경공동체와 남북경제공동체
3. 통일과 동독/북한주민의 힘
 - 가. 우리가 바로 국민이다
 - 나.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
 - 다. 북한주민의 결단
4. 독일통일 20년: 평가와 시사점
5. 통일전령 새터민

1. 서독의 통합정책 / 통일정책과 시사점

- “독일연방공화국은 서방세계의 동쪽 끝이 되었고, 독일민주공화국은 동방세계의 서쪽 끝이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독일의 분단은 유럽의 분단이 종결되지 않는 한 끝이 날 수가 없게 되어있다.”(Richard von Weizsäcker, 1985)
- “독일민족이 어떤 형태의 국가를 선택하든 우리에게서 유럽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는 유럽을 대가로 독일의 발전을 추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연방공화국은 유럽통합과 아울러 서로 배척하고 있는 동·서 유럽을 한데 묶는 노력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야만 전체 독일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두 개의 독일국가 간 접근을 진척시킬 수 있다. 독일분단은 오랫동안 유럽통합을 지연시켜 왔다. 이제는 유럽통합을 계속하는 것만이 새로운 공포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독일분단의 결과를 개선시키는 첩경이다.”(Robert Leicht, 1987)¹⁾
- 전쟁도발의 책임을 물어 분단된 독일은 ‘통일’이란 말조차 거론할 수 없었음. 통일을 이야기하는 순간이 바로 국제법적으로 분단된 독일의 상황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임. 결국 분단된 독일의 양쪽은 각자가 처한 상황, 지향하는 목표와 그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음. 그 중에서 독일연방공화국 즉 서독은 통일을 가슴에 품고 긴 안목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되 통일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완화하거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필수 조건들을 하나씩 채워갔음.
-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독일과 독일민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서독이 국제사회와 평화적으로 공동 번영할 수 있는 훌륭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통합정책’이 있었음. 패전국인 서독의 입장에서 전쟁도발의 과오를 벗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주변국가와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음. 따라서 어느 한쪽만을 택하는(Entweder-oder) 것이 아닌 모든 쪽을 향하는(Sowohl-als-auch) 외교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정부수립 이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음.
- 통합정책은 국제적 상황의 전개에 따라 서방통합, 동방통합, 전 유럽통

합이란 다자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독·미, 독·불, 독·소, 독·폴, 독·독과 같은 양자적 차원에서 중첩적·복합적으로 진전되었음.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통일의 가능성이 도래한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성과를 토대로 통일을 무리 없이 이끌어내었음.

가. 콘라드 아데나워

- 아데나워정권이 서독역사에서 차지한 중요한 정치적 발전은 서독을 ECSC에서 출발하여 EEC에 이르는 서방세계와의 경제공동체 형성과 NATO라는 정치·안보 공동체에 편입시킨 사실임. 서방연합국과 서구 이웃나라들에 서독을 성공적으로 결속시킴으로써 서독의 헌법제정과 국가 건설, 산업시설 철거를 종결시킨 「페테르스베르크협정」 체결, ECSC 가담과 경제 발전 및 중심적 역할, 재무장과 NATO가입, 그리고 피점령국 지위를 종결시킨 「파리조약」 등을 이끌어내었음.
- 아데나워는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자유, 그 다음을 평화, 그리고 그 다음을 통일로 삼았음. 그가 반대한 것은 통일자체가 아니라 공산독재체제 형태의 통일을 반대한 것이었음. 그는 미·영·불 전승3국이 두려움과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어떤 정책도 서독정치의 회복과 경제의 재건을 더디게 할 것이고, 서방통합을 확고히 하는 정책만이 소련과 동독의 공산주의자들이 서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라고 믿었음.

나. 빌리 브란트

- 브란트의 ‘신동방정책’은 서방통합을 통해 서부유럽에 한쪽 발을 굳건하게 딛고 일어서게 된 서독을 이제는 동부유럽에도 다른 한쪽 발을 디디게 하여 유럽대륙의 양쪽에서 서독이 두 발로 딛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경제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달릴 수 있게 하는 틀을 만들었음. 그의 신동방정책은 전후에 독일이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인정한 반면, 전쟁 이후에 부정되던 더 큰 것을 얻었음. 동부유럽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통해 유럽에서 좀 더 긍정적인 서독의 정치적 입지를 가능하게 해주었고, 동부유럽시장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좀 더 주체적인 서독의 외교정책을 펼치면서 서독이 국제무대의 중요한 주역으로 부상하게 해주었음.

아데나워정권이 서독역사에서 차지한 중요한 정치적 발전은 서독을 ECSC에서 출발하여 EEC에 이르는 서방세계와의 경제공동체 형성과 NATO라는 정치·안보 공동체에 편입시킨 사실임

브란트의 ‘신동방정책’은 동부유럽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통해 유럽에서 좀 더 긍정적인 서독의 정치적 입지를 가능하게 해주었고, 동부유럽시장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게 되었음

**1980년대 콜 정부의
'균형정책'은 서방통합을
주요 축으로 하되
동방과의 접근을
심화시키면서 서독의
정치·외교력을
키워나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나가는
실리외교에 중점을
두었음**

- 한편 브란트의 독일정책은 아데나워 시기의 그것을 180도 뒤집어 동독의 공산체제와 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독일영토 위에 한 민족 두 국가의 존재를 받아들인 것이었음. 그는 정치적 분단을 인정함으로써 그 반대급부로서 분단의 부작용을 감소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잃지 않는 것이 진실로 민족적인 독일정책이라고 믿었음. 그 결과 동·서독 사이에는 교류와 협력의 물꼬가 터져 상생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민족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었음.

다. 헬무트 콜

- 1980년대 콜 정부의 '균형정책'은 이전 서방정책과 동방정책의 공과를 검토한 바탕위에 서방통합을 주요 축으로 하되 동방과의 접근을 심화시키면서 서독의 정치·외교력을 키워나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나가는 실리외교에 중점을 두었음.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동구 사회주의권의 변화란 세계사적 변화 속에서 미래 유럽의 평화질서를 염두에 두면서 통일의 여건을 하나씩 조성했음. 그리고 통일의 상황이 도래하였을 때 동·서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간파하고 그 의도에 부응하는 통일외교를 펼침으로써 통일이란 민족적 소망을 실현시켰음.
- 구체적으로 동·서독의 통일과정을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으나 그 진행을 적절히 제어된 구도 속에서 이루고자 한 전승4국과 관련 국가들의 이해를 '2+4협상'이란 틀로 수용하여 통일독일이 유럽통합의 추진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유럽의 평화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었음. 그리고 통일독일이 방위위주의 비핵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군사소국화 정책을 추진하고, NATO에 가담하되 동독지역에 대한 외국군의 주둔을 금지하여 서방연합국과 소련의 이해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독일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안보정치적 우려를 불식시켰음. 또한 오데르-나이쉴강을 독·폴 간의 항구적인 국경선으로 인정함으로써 동독에서의 평화혁명 이후 고조되었던 독일의 통일에 관한 전 유럽국가, 국민들의 우려를 마지막으로 불식시켰음.

라. 평가

- 통일 이전이나 통일과정을 막론하고 서독의 정치지도자들이 일관되

게 중요하게 믿고 추진해 온 정책은 서구와 손을 잡아야만 서독사회를 근본적으로 민주화된 정치문화를 가진 새로운 사회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디딤돌로 삼아 동구사회를 개혁하고 민주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음.

- 서독은 정치·경제·안보·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서구와의 연대라는 필수사항을 충족시키는 가운데 소련 및 동구권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선택사항을 충족시켜나갔음. 서독이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방세계의 확고한 일원이 되지 않았더라면, 다른 나라의 희생을 딛고 자국의 힘을 추구하려는 잘못된 민족주의가 아니라 타국과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하려는 민주사회로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통일의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고, 통일 환경이 조성된 그 순간에 소련은 물론 서방연합국들도 독일의 통일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임.
- 서독이 불란서와의 화해에 이어 서방세계, 나아가 동방세계 그리고 전 유럽에 융화·통합되어가는 그 도정은 독일연방공화국이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할 역사적 시기였다고 할 것임. 독일민족의 재부상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냉전 → 데탕트 → 신냉전 → 탈냉전으로 전개된 세계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자국의 힘에 서방우방국들의 힘을 더하고 나아가 소련의 지지와 힘을 빌려 자국의 이해를 관철해 나간 눈부신 외교적 성과의 시기였음.

마. 우리의 통합정책/통일정책

- 남북통일에 대해 주변 4국이 미칠 수 있는 사실상(*de facto*)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서독의 통합정책과 통일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고 심층적인 연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음. 사실 ‘참여정부’는 통일보다는 평화를 앞세우고, 통일의 선결 요소로서 통일을 위한 긍정적인 주변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통합정책을 추진해온 것이 사실임. 정치·군사적 차원에서는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동북아다자안보를, 경제적 측면에서는 남북경제공동체는 물론 동북아경제공동체를, 문화적 측면에서는 동북아문화공동체²⁾의 건설을 추진하였거나 적어도 개념적으로 준비하고자 하였음.
- 정치·군사·경제·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을 위한 노력은 정책의 지향성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음. 그러나 통일을

*통일 이전이나
통일과정을 막론하고
서독의 정치지도자들이
일관되게 중요하게 믿고
추진해 온 정책은 서구와
손을 잡아야만
서독사회를 근본적으로
민주화된 정치문화를
가진 새로운 사회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디딤돌로
삼아 동구사회를
개혁하고 민주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음*

**‘참여정부’는 통일보다는
평화를 앞세우고,
통일의 선결 요소로서
통일을 위한 긍정적인
주변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통합정책을
추진해왔지만 통합을
위한 참여정부의
정치·군사,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의
노력은 그 정책들이
가지는 내용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되 그 도정에서 국가적 역량을 키우고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이러한 중차대한 국가전략을 참여정부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체계화하지 않은 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성과는 의도한 바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음.

- 먼저 정권의 시작과 더불어 발표된 동북아경제중심국가의 건설은 주변국들로부터 무관심과 반발을 초래하였음. 미·일이라는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 사이에서, 육일승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부상의 상황에서 제기된 경제중심국가론은 현실의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개념적인 측면에서조차 생명력을 가질 수 없었음.
- 동북아다자안보협력 구상의 경우 그 선결 요소가 미국과의 확고한 공감대 형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군사협력관계에서는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음. 그 과정에서 선불리 발표된 한국의 ‘동북아균형자론’ 구상은 국내·외적으로 의도와 실현가능성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음.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론과 마찬가지로 민족의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 동북아균형자론 역시 현실성이 없는 슬로건으로서 평가되었음.
-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의 경우, 국가 간 정치·군사·경제적 측면에서의 협력에 있어서 상호 ‘원-원’ 관계가 형성된다고 해도 각국이 얻는 이익의 크기가 동일할 수 없고, 따라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그 갈등을 제한하고 협력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협력하는 국가 간 문화적 공감대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는 정책방향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이 국내적으로도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제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와 내용, 향후 방향성에 관한 논의와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현실적인 평가라 할 것임.
- 이상에 비추어볼 때 통합을 위한 참여정부의 정치·군사,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의 노력은 그 정책들이 가지는 내용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음. 세 가지의 정책방향이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상호관련성을 가지면서 단계적으로 준비되지 못하였음. 다음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의 통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관련국과의 공감대와 협력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하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천명·추진됨으로써 실천성이 근원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었음. 더구나 정책방향에 대한 국내적 공감대 형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추진됨으로써 실현가능성이 떨어짐은 물론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음.

- 통합을 위한 참여정부의 정책적 방향성 그 자체는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음. 통일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은 우선 대한민국이 동북아 역내에서 평화적으로 상생, 공영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로서 확실하게 인식되게 하고 그들이 받아들일도록 하는 것임. 그 과정에서 서독의 서방통합정책 및 동방통합정책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대미·일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대중·러 협력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임. 특히 서독이 확고한 미국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의 세계전략에 편승하면서 자국의 실리, 특히 통일과 관련된 국가이익을 차근차근 충족시켜갔다는 현실외교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임.

바. 주변국과의 통합과 남북통합

- 이러한 주변국과의 통합정책과 더불어 남북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임. 주변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북한이 덧붙여져 활발한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 동북아 역내 전체의 평화적 상생공영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우리의 통합정책과 남북교류·협력 동시 병존정책은 더욱 환영되고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임.
- 이러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고도화 되고, 남북 간에 공동체가 형성되고, 나아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려는 남북 간의 의지가 표명되는 순간이 도래할 경우, 동북아 4국과 국제사회가 통일된 한반도라 할지라도 역내국가 나아가 세계사회와 함께 평화적으로 상생·공영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굳게 하여 한반도통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장기적인 통일정책임.

통일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은 우선 대한민국이 동북아 역내에서 평화적으로 상생, 공영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로서 확실하게 인식되게 하고 받아들일도록 하는 것임

**통합정책, 통일정책,
선진민주사회건설은
따라서 분단된 조국의
상황에서, 세계 최강의
4국에 둘러싸인 우리의
현실에서 대한민국이
동시에, 함께 추진해야
할 우리민족의 비상을
위한 유일한 국가전략일
것임**

사. 통합정책, 통일정책, 선진민주사회

- 이러한 통합정책과 통일정책의 연계적인 동시추진 과정에서 간과되지 말아야할 사항은 그 과정에서 우리사회를 고도의 선진민주사회로 발전시키는 일임.³⁾ 우리사회를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민주화된 사회로 발전시킬 경우 우리와 함께 하려는 국제사회의 믿음은 더욱 커질 것이며,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만들려는 한민족의 의지는 그만큼 높아질 것임. 통합과 통일을 위한 우리의 유인력, 우리의 자생력은 그만큼 커질 것임.
- 통합정책, 통일정책, 선진민주사회건설은 따라서 분단된 조국의 상황에서, 세계 최강의 4국에 둘러싸인 우리의 현실에서 대한민국이 동시에, 함께 추진해야 할 우리민족의 비상을 위한 유일한 국가전략이라 할 것임.⁴⁾

2. 상생·공영과 녹색성장: 통합정책/통일정책

-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2008년 8월 15일 대통령의 건국 60년 기념 경축사에서 향후 60년의 국가비전으로 제시되었음. 녹색성장은 환경을 보호·개선할 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 놓인 경제를 회생·발전시키면서, 지속가능한 국가성장을 이룩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동력원으로 제시된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상생·공영의 국가대전략’에 기초하고 있음.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공동번영을 위해 중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합정책’의 틀 속에서 체계화 된 것임.
- 정치·군사적 차원에서의 상생공영을 위한 통합정책은 6자회담을 기초로 한 동북아 양자 및 다자안보협력, 그리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평화유지 및 안보협력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경제적 차원에서는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과 병행하여 전 세계적 차원에서 FTA 체결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이 진척되고 있음. 문화적 차원에서는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과 병행하여 국가위상에 걸맞은 문화외교가 강화되고 세계 국가 및 시민과 함께 호흡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가. 인간과 자연의 통합: 녹색성장

-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이러한 상생·공영의 통합정책을 철학적, 이론적, 실천적으로 보완하는 국가전략이라 할 수 있음. 상기 세 차원에서 상생·공영정책이 모두 인간 간, 국가 간에 중점을 두는, ‘인간중심적인 통합정책’이라면,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상생·공영을 이룩하려는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통합정책임. 즉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통해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갈등을 회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군사, 경제 및 문화적 상생·공영이 실현될 수 있는 질적, 양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상생·공영이 인간 간, 국가 간 상생·공영의 전제임을 주목한 것이며, 여기에 대한 지역적, 세계적 공감과 동참을 촉구한 것임.
- 한편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에도 수렴되고 있음. 현재 남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경제 및 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복합적으로 직면하고 있음. 지구온난화, 한반도를 뒤덮는 황사문제, 서해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 에너지 위기,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 등의 경제문제를 함께 안고 있음.
- 환경문제의 경우 이를 남한 혹은 북한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쌍방의 협력만이 해결을 위한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음. 우리가 아무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룩한다 하여도 북한의 경제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여 그들의 유일한 에너지원인 석탄을 대규모로 사용한다면,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맑은 환경에서 생활하려는 우리의 목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음. 다른 한편으로 현재 북한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를 갖추고 있지 못함.
- 경제문제의 경우 청정에너지 보급,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우리의 신성장동력 핵심이 바로 북한에게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업으로서 녹색성장 국가전략 자체가 남북한이 ‘윈-윈’할 수 있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의 핵심일 수 있음. 이미 우리는 정치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차원에서 상생·공영을 위한 통합에 대한 동참을 북한에서 제시하였음.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갈등을 회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군사, 경제 및 문화적 상생·공영이 실현될 수 있는 질적, 양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남북환경공동체와 남북경제공동체

- 한반도의 환경보호·개선과 경제성장, 즉 ‘남북환경공동체’와 ‘남북

독일의 통일이**우리에게 주는 가장****중요한 시사점은 통일을****이뤄낸 근본적인****추진력이 바로 동독의****주민들로부터 뿜어져****나왔다는 사실임**

경제공동체'를 동시에 형성한다는 상생·공영의 한반도 녹색성장을 제안하고 있는 것임. 남북한의 경제·환경적 능력을 시너지화 하여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여 한반도를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적인 통일의 길로 진척시켜나가려는 것임. 녹색성장 국가전략이 상생·공영에 기초한 통합정책이며, 또한 대북정책, 통일정책인 것임.

3. 통일과 동독 / 북한주민의 힘

- 20년 전 독일은 40여년의 분단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음. 독일의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통일을 이뤄낸 근본적인 추진력이 바로 동독의 주민들로부터 뿜어져 나왔다는 사실임.
-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은 당초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의 정신적·물질적 복지를 약속하였음. 그러나 동독 주민들은 동독 사회주의체제 40년 동안의 체험을 통해 “이것은 아니다”란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음. 특히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측면에서 서독의 체제가 훨씬 우월하고 인간적이란 현실을 깨달으면서 그들의 고뇌는 깊어만 갔음.

가. 우리가 바로 국민이다

- 평화적인 독일통일의 위대한 승리는 이들이 절망에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바를 스스로 획득하기 위해 몸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예정되었음. 동독정권에 대해 너희들이 그토록 주인이라 선전했으나 실상은 굴종과 복종을 강요당한 “우리가 바로 국민이다 (Wir sind das Volk!)”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데모행진을 시작하였음.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의 서독대사관에 진입하여 서독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음. 결국 1989년 11월 9일 동독정부는 베를린장벽을 개방할 수밖에 없었음.

나.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

- 변혁을 위한 동독 주민의 힘은 이제 통일의지로 분출되었음. 기복도 있었음. 데모를 이끌던 동독 지식인들이 인간의 얼굴을 가진 진정한 사회주의를 다시 한 번 실현해보자고 제의했음. 급작스러운 사태 진

전에 서독정부 또한 점진적인 통일방안(콜 수상의 ‘통일10개항계획’)을 제안했음. 그러나 동독 주민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통일을 열망한다”고 절규하였음. 데모 구호도 “우리는 하나의 국민(Wir sind ein Volk!)”으로 바뀌었음.

- 통일에의 결정적인 마침표 역시 동독 주민에 의해 이루어졌음.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실시된 자유총선에서 동독 주민들은 조속한 통일을 제시한 정당을 다수가 지지함으로써 통일을 기정사실화하였음. 독일의 통일은 사실상 이 투표에 의해 결정되었음. 동서독에서 함께 실시된 이 선거에서 양 독일 주민들이 통일에 대하여 민족자결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임.
- 이 대목에서 어느 국가, 어느 민족도 독일 통일을 반대할 명분을 근본적으로 잃게 되었음. 즉, 독일통일이 동독 주민들 마음속에 형성된 근본적인 체제비판과 거부, 서독 민주사회가 자신들의 지향체제임을 깨닫고 선택한 동독 주민들 의지의 산물이었던 것임.

다. 북한주민의 결단

- 독일통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줌. 한반도 통일의 근본적인 동력도 북한 주민들에 의해 뿔어져 나와야 한다는 사실임. 평화통일을 전제할 때 우리가 아무리 북한과의 통일을 염원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여기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음. 따라서 통일은 북한 주민들이 우리 사회를 좀 더 잘 살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체제로 인식하고, 우리들을 함께 살고 싶은 동포로 받아들일 때 실현될 수 있음.
- 평화통일이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결단하여 몸을 움직일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다음의 사실을 북한주민들이 듣고 보고 느끼도록 해야 함.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며, 원한다면 대한민국은 그들을 어디에서든, 누구나, 얼마든지, 언제든지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고, 언젠가 함께할 북한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그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이 있다는 점임.
- 대한민국은 이러한 원칙을 다시 확고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함. 북한

반도 통일의 근본적인 동력도 북한 주민들에 의해 뿔어져 나와야 하고, 평화통일이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결단하여 몸을 움직일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북한주민들이 듣고 보고 느끼도록 해야 함

**현 단계 대북정책,
통일정책의 핵심은
북한 주민들이
우리 사회를, 우리의
동포애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주민들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이란 희망의 싹을 심어야 함. 죽음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북한 주민들을 전부 즉시 받아들여야 함.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도 필요함. 이산가족의 재결합,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환을 국가적 책무로 해결해야 함. 대한민국의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다면 북한 주민들은 언젠가 화답할 것임.

- 결국 현 단계 대북정책, 통일정책의 핵심은 북한 주민들이 우리 사회를, 우리의 동포애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 현실을 깊숙이 깨닫게 하는 것임. 따뜻한 우리의 동포애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정신적·물질적 삶의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한 과정의 연속선에서 그들이 통일을 향한 민족자결권을 행사할 때가 다가올 것임. 우리와 우리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절감될 때 북한 주민들은 통일로로의 행진을 시작할 것임. 베를린장벽을 스스로 부순 동독 주민들처럼.

4. 독일통일 20년: 평가와 시사점

- 1996년 한 독일의 고위관리는 최근의 통일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음. “이제 더 이상 ‘문제’, ‘문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제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이것을 문제라 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동독수준의 경제를 세계 최상위의 서독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동서주민간의 갈등, 심리적 분단을 이야기 하는데 당신의 나라에는 지역 간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 민주화된 미국에도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갈등이 없습니까? 그것이 몇 십 년이 지나도 사라졌습니까? 독일은 통일로 인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입니다. 국가적인 일상적 과제를 안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응답하였음.
- 통일 이후 우리가 겪을 어려움을 부정하거나 축소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문제에 대해 우리의 어떠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할 수 있음. 그에 따라 같은 어려움이라도 희망차게 극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버거워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불만만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임. 존재하는 어려움의 여러 측면 가운데 어떠한 점을 강조하고

홍보하고 교육할 것인가에 따라 그것을 둘러싼 사회심리적 갈등의 정도가, 그 극복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임.

- 통일된 독일은 큰 어려움을 겪었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독일은 정치적 주권을 완전히 회복했고, 라인강이 아니라 이제는 ‘엘베강의 기적’을 바라보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음. 전 세계에 당당하게 군대를 파견하고, 유럽통합의 기관차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 동서간의 갈등도 있지만 동쪽출신이 연방수상이고, 축구국가대표팀의 주장임.
- 통일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한반도에 도래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민족대계에 맞는 일임. 주변정세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임. 통일 이후에 닥칠 어떠한 어려움도 차분하게 장기적으로 극복해야 할 일상적인 국가적 과제일 뿐임. 광복을 맞은 후 겪었던, 6·25전쟁이 끝나고 겪었던 그 어려운 삶을 우리 선조들이 은근과 끈기로 후세를 위해 깨끗하게 감내하고 걸었던이. 독일통일 20주년을 바라보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다시 한 번 통일할 때임.⁹⁾

5. 통일전령 새터민

- 새터민은 이제 대한민국이 지켜줘야 할 우리의 국민임. 새터민은 통일의 전령임. 국내에 정착한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서 그들이 꿈꿔 온 삶을 현실화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사선을 넘은 순간을 생애 최고의 선택으로 여기며 가슴 벅차 할 것임. 바로 이들이 북한 땅에 남은 2400만 주민에게는 삶의 희망이 될 것임.
-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으로서 오직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내려온 그들이 꿈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함. 최근 새터민을 위장한 간첩이 붙잡혔음. 이 사건이 새터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됨. 오히려 그들의 국내 정착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해질지 모를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전 문제까지 더욱 신경을 쓰는 계기가 되어야 함.
- 그들을 위해,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자 번뇌하고 있을 북한의 모든 주민에게 삶의 희망을,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통일 관련 존재하는
어려움의 여러 측면
가운데 어떠한 점을
강조하고 홍보하고
교육할 것인가에 따라
그것을 둘러싼
사회심리적 갈등의
정도, 그 극복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임*

임. 2만 명도 되지 않는 새터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마음과 제도가 우리에게 없다면 남북통일은 깨끗하게 단념하는 편이 옳음. 한 줌의 새터민과의 ‘작은 통일’도 이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한반도의 통일을 꿈꿀 수 있을까?

-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은 북한 주민의 결정과 행동임.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확인하는 순간 통일의 대열에 나설 것임. 그런 결단의 시간으로 이끄는, 촉진하는 동력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새터민일 수 있음.

편집: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고정선(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국문에디터: 강길효(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주석

- 1) 서지원 역, 「도이치현대사 4: 허상의 붕괴와 통일 선택」(서울: 비봉출판사, 2004), p.29 및 30에서 재인용.
- 2) 동북아문화공동체의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국책연구기관들이 대거 참여하는 다년간 협동연구사업의 형식으로 연구되었음.
- 3) 선진민주사회는 정치·경제·사회·산업·환경적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확립된 사회로서 이를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관계적 차원에서도 실현시켜야 함. 선진민주사회 건설의 논의와 그것이 대북·통일정책에 가지는 함의에 관해서는 손기웅, “선진민주사회 건설과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방향,” 「외교」, 50호(1999), pp.35~43 참조.
- 4) 손기웅, 「통합정책과 분단국의 통일: 독일사례」(서울: 통일연구원, 2007) 참조.
- 5) 손기웅, 「독일통일: 쟁점과 과제1」, 「독일통일: 쟁점과 과제2」(서울: 늘봄플러스, 2009)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